



# 다시 올 ‘기본소득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서로 안지는 오래 됐으나, 공백이 크다. 내가 아는 한, 안효상 이사장은 개인사를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다. 물으면 대답을 회피하지는 않으나 길게 말하는 법이 없다. (나한테만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안효상 이사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상노선적 변화와 그 이유가 궁금했다. 아무튼 매우 사심 가득한(?) 인터뷰였다. 개인사도 사적 개인사와 공적 개인사가 있을 것이다. 안효상 이사장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장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 안효상 이사장 개인의 사상노선적 변화의 과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운동 변화과정도 윤곽 정도는 드러난다. 인터뷰에 응해준 안효상 이사장과 사진까지 잘 찍는 엄선미 실장께 감사한다.

이사장이 되셨는데,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 뭐 하고 지내나?

책 열심히 보시고?

- 책이야 열심히 보고 있고, 개인사는 큰 변화가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대선기간 중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 참여하는 기본소득후보 지원과 공동선언 등을 하기 위해 대표자 회의와 토론회 등을 했고, 지방정부나 지역 기반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나머지 활동으로는 기본소득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기본소득운동에 접하시게 된 계기를 과거에서부터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개인사적이라고나 할까요?

## 2007년 대선을 계기로 기본소득과 만나게 돼

- 2007년 대선이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사회당 금민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국민기본소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정제돼 있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공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본소득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건 2007년 대선이 끝나고 2008년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부터입니다. 2009년에 접어들면서 2008년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토론회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본소득이 좀 더 전면에서 등장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강남훈, 광노완, 그리고 금민 선생 등이 참여했는데, 기본소득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다음 카페 그룹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서클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무렵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프로젝트로 강남훈, 광노완 두 분이 프로젝트 보고서 냅니다. 2009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이 당시 사회당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2009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간 해여서 한국의 현실정치나 사회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니 할 수 없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1월 이전까지는, 비록 저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열심히 기본소득을 연구해 봐야 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사회당 정치학교 교장이라는 걸 맡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는 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이 저의 중심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기본소득지구 국제학술대회가 서강대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기본소득 서울 선언’도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그 대회에 파레이스, 야마모리, 수플리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당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부 좌파들도 약간 호의적인 시

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이걸 매우 공식적인 역사 일 텐데요, 상파울루에서 있었던 13차 BIEN 대회에 가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지구네트워크네 가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21세기 이후의 일이니까 세기를 거슬러 좀 더 멀리 올라가서 복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해보지요. 우리 때 학생운동 화두가 처음에는 소위 ‘삼민’, 즉 ‘민족, 민주, 민중’이었잖습니까? 민족 문제는 통일문제, 민중 문제는 계급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주는 군부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당대 현실과 결부되면서 주장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중에에는 민주문제가 약간 물러나면서 민족문제와 민중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린 NL/PD가 등장하고, 이후에는 민족에 방점을 둔 NL과 민중에 방점을 둔 PD로 나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두 겪으셨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들은 지금의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들로부터 기본소득에 이르기까지는 또다른 긴 과정이 있었을/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 공화주의 이념과 결부하여 기본소득을 이해

- 사실 아까 빼놓은 얘기있습니다. 당시 사회당 그룹 내에서는 기본소득이 독자적으로 얘기됐다기보다는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이념하고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 당시 현실 운동에서 ‘삼민’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이념적 사상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맑스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현실의 전략과 조직 노선에서는 레닌주의적인 경향, 이런 흐름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7년을 경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도화된 민주주의,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91년까지도, 그러니까 노태우가 집권하던 시절까지도 5공화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민주주의적 흐름이 과거로 퇴행내지 역전되지는 않더라’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운동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좀 더 뒤로 물러났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민주주의 문제가 뒤로 밀렸다고 보다는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독재-민주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독재의 안티테제라는 의미의 민주는 더 이상 화두가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수자라고 하는 문제들이 90년 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민주주의 확장 시도, 확장기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였던 ‘민중’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 맑스주의적인 경향에서는 이른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성격’을 강조했었죠. 산업자본주의의 발전, 그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성장,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중심에 놓는 사회 변화 추구, 이런 문제의식과 구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87년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은 이런 문제의식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당시에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9년(베를린 장벽붕괴), 91년(소비에트 해체)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 모순이나 민족 모순이 여전하고 민중의 삶 역시 피폐해 있지만 그 삶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지향했던 체제에 대한 실망 혹은 실제적 준거점의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련이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고상하고 이상적인 이론도 현실에서는 왜곡될 수 있어

즉 원래의 이념이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쉽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체제 자체의 붕괴는 파장이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체제에는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바뀌고 개혁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의 잠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의미에 대해,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흔히 말하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류의 생각이랄까요? 이런 사고가 저의 밑바탕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이상적인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왜곡될 수도 있다. 여기에 있는 수단을 갖고 저기로 가는 것이 갖는 난점이랄까, 뭐 이런 생각들을 90년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 했던 다양한 공부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알튀세르 식의 태도, 즉 두 개의 전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산주의 혹은 정통파와 싸우면서도 반자본주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두 개의 전선적인 태도. 56년 흐루쇼프의 탈 스탈린화에 대한 태도였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사고로 당시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던 철학적, 사회과학적 흐름들을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전까지 학생운동에서 공부했던 사회과학은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어서 현실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변화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변화, 1945년 이후의 변화, 1970년대 이후의 변화,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좀 더 현실을 천착하려는 이런 식의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더 주력해서 공부한 건 68이었습니다. 68이 뭘까? 당시 이해하려던 것은 세계적 차원의 운동으로서의 68입니다. 68이 세계적 차원의 운동이라는 것은 68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학생운동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소련과 동구 내부의 반체제 운동, 제3세계의 민족해방 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68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남북간의 세계 질서든 당대의 체계에 대한 반체제 운동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체제 대결에서 이 체제가 졌으니까 이 체제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왜 각각이 다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는 방식으로 68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급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천착. 또 하나는 그 속에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 있는 수단과 관념과 생

활 방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실현하려는 데서 오는 난점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19세기, 20세기 전반기의 서구의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21세기 초에는 이론, 사상을 현실에 정치적으로 구현하는 문제, 방법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참여가 있을 텐데, 제도적 참여를 하려면 좀 좁은 의미에서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에 나갈 때, 그냥 ‘자본주의 타도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구체적인 당면 과제를 내놓아야 하지요. 거기서 나타난 게 2007년 대선 당시 사회당 내에서의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화주의, 또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정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뭘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넓게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 그것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이른바 최대 강령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당면한 과제를 외치는 것이 정치이고, 그 정치를 통해 어떻게 제도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제도라는 통로를 통과할 것인가 혹은 이용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 현재적 수단과 관념, 생활방식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실현하는 데서 오는 난점을 생각

민중과 민주 중에서 ‘민중’ 관련해서는 얘기가 된 것 같네요. 과도한 단순화이긴 하지만 이사장님께서서는 ‘민중’ 쪽의 운동을 주로 하셨는데, 80년대에 제기된 민족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의 입장에서요.

- 현대 국가의 민주주의의 문제도 넓게 보면 인민 주권에 관한 문제, 즉 사람들 자신들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혹은 소수가 독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지요. 그런데 주권 문제를 외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즉 주권이 넘대로 하자면 당연히 외국 군대도 없어야 되고 내정간섭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말예요. 아무튼 민족의, 흔히 말하는 국민국가의 자주권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어요. 문제는 이 문제가 한반도 분할 과정과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겠지요. 해방 후 하나의 국민국가 형성이 과제였기는 한데, 문제는 분단 이후의 과정이 서로 너무 달라서 상당히 독자적인 나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나라들로, 두 개의 지역에 각각이 좀 더 온전한, 민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당시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물론 반공 교육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운동사 혹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과정 속에서 이른바 김일성파가 권력을 잡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국가의 운영방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냥 간단히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북을 그냥 섞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 문제는 좀 시대착오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이었던 중요한 과제였을 텐데, 그 후에 독자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저는, 여러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는 했지만 왜 한

국이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걷는가, 독자적 사회구성체로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서 민중 혹은 계급은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바꾸고 싶으면 스스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 남북은 국가수립과정 현저한 차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각자 발전을 도모해야

현실의 제도 정치에 참여해야겠다. 그러려면 최대 강령이 아니라 정책을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일부 답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계급 문제에서 기본소득으로, 사상적 전환? 변화?를 겪게 된 이유나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장 큰 문제의식은 왜 노동자 계급이 이른바 세계사적 계급이냐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학생때는 사회가 부르주아화, 프롤레타리아화라는 양극화된 두 계급으로 발전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 계급은 생산자주의라는 관념에서는 억압받는 계급이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전면화 속

에서는 미래를 움켜쥔 계급, 보편화된 계급이라고 추상적으로 이해했는데, 실제 현실에서 정말 그런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계급은 전체 인구의 일부, 숫자가 많건 적건 일부인데 그들이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아까 말한 인종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흔히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문제들과 접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 계급이 보편적 계급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이걸 좀 허구적인 가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90년대에 이론적으로 하기 시작했구요. 노동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 변화 특히 IMF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른바 동질화 체제가 깨지고 계급 내에서 분할이든 그 밖에서의 분할이든 어쨌든 분할들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 외의 다른 정체성에서 보면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구나, 노동자 계급 내에도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사람들을 계속은 아니지만 특정 시점에 하나로 묶어내는 행위구나, 그러다가 다시 깨지고 다시 묶어내고 이런 행위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계급으로 호명하는 게 아니라 인민이나 시민으로 호명하는 것이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사회적 공화주의에 동의하는 것이고, 이것에서 다시 기본소득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를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의 밑바탕에는, 철학이나 이론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게 뭘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해방되면 노동자가 아니지 않은가하는.

##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이 보편성을 지니는지 의문 들 어 사회적 공화주의 수용

그런데 사회적 공화주의가 뭔가요?

- 공화주의를 이해하게 된 거는 90년대 미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18세기 논쟁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공화주의’가 나와요. 그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공화국’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니까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요. 공화주의는 이념적으로는 타인을 착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착취당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연합체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페티트 같은 사람은 비지배 자유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입니다. 매우 고대적인 개념이고 고대에서 동등자들이란 자영농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현대사회에서 다 동등자니까, 모두에게 땅 나눠줄 테니까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동등자, 동등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기본소득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의 물질적 보장, 그러니까 스페인의 라벤토스나 까사사스 식의 사고방식으로 초기에 기본소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이론에는 정치적 토대라는 게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도대체 사회주의가 되면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기존 사회주의 이론의 보충, 보완을 공화주의라는 틀로, 18세기 미국 혹은 고전고대, 아테네 로마 이런 것들을 경유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사회주의는 아주 다른 것을지칭하는 말인데 당시 저 개인의 정치적 지향으로서는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된 것일 텐데 ‘사회적’이라는 관형사가 붙는 공화주의는 그냥 ‘공화주의’와는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에서 동등자로 살기 위한 물질적 토대 보장이 사회적 공화주의의 핵심

- 적극적 참여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동등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착취하지도 않고 착취당하지도 않기 위해서는 삶의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래서 고대부터 18세기 제퍼슨까지는 땅을 주자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토마스 페인도 15 파운드를 21살 때 주자고 했는데, 그냥 써버리라는 게 아니라 땅 사고 소 사서 농사 지어라, 이런 게 깔려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김상봉 선생 같은 사람이 공화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양립 가능하냐는 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동등자로 살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화주의의 가장 난점은 페티트에서 보듯 공화주의에 경제 이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에는 공화주의가 가능한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사회적 공화주의나 민주적 공화주의는 기본소득이 됐든 기초자산이 됐든 동등자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타인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한테 물적 토대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물적 토대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동물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폴리스에 참여하려면 물적 토대라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대와는 달라서 그 물적 토대를 사회가 제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 공화주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부연하자면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은 누구를 미리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이 자격이죠. 다시 말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누구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발언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민주적 공화주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로 본 거죠.

## 이번 대선까지 한국기본소득 운동의 한 사이클,

## 정치적 통로 찾기 시도는 일단 실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를 거쳐서 이사장이 되었는데, 기본소득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실 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를 맡은 게 2015년 정도였을 겁니다. 2009년이 한국기본소득운동에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 2007~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 한국기본소득운동이 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 혹은 세계사적 트렌드와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운동을 반추해보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나름의 대답들을 하려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제도화된 민주주의 하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모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대선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는데, 정치적 통로를 찾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대선이라는 제도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이니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가 됐으면 또 다른 정세가 펼쳐졌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흔히 말하는 중앙 정치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봉쇄된 거라고 봐야 겠지요

그러면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 흔히 받는 질문이고 혹은 비판이기도 한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운동과는 달리 기본소득은 모두의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아무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흔히 비판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이라면, 물론 노동자 내부에서의 분할도 있고 심하게 말해서는 이익단체화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속성을 갖고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그걸 필요로 하는 당사자로부터 발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본소득의 운명, 위치라고 생각해요. 혹은 난점, 아포리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처

럼 보이지만 매우 보편적이어서 누구는 정책으로 보고 비판하고 누구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어쨌든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굳이 기존의 정치론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포퓰리즘적 계기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소득 도입전략을, 기존 정치 틀 내에서의 그 등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등을 타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10년, 11년 월가 점령운동 같은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그 중 하나는 기존의 정치적 틀 내에서 개혁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와 그 나라의 제도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방식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기본소득이 그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이 그 흐름을 타는 방식이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구별되는 독자적 운동이라기 보다는 흐름을 타는 거고, 그랬을 때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운동은 그런 흐름에 타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는 포퓰리즘적 계기 필요

대선 얘기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할까요, 이재명이 없는 기본소득과 혹은 이재명이 부활하는 상황과 이런 것에 기본소득운동이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기본소득 의제의 사회적 확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요. 다만 우리가 되고 안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재명과 관련하여, 이번에 대선을 지나면서 더 확실히 느끼게 된 것인데, 한국에는 정해진 포퓰리즘의 계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의 의식이 올바르진 않겠지만 그렇다. 그렇다면 다음 대

선에서 또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들고 나오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이 위대하나 위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에 결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구상하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그가 성남부터 경기도까지 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과정, 혹은 경험을 의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직접적 경험인건 의제를 통한 경험인건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번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이렇게 소환될 수 있고, 이렇게 의제화가 되는 데 중요했던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는 다분히 이재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 아니냐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H. 카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죠. 어떤 사건의 원인에 대한 답안지를 쓰라고 하면 하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C 학점이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B 학점이고,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데 그 사이의 관계까지 설명해야 A 학점이라고 했지요.

A 학점짜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 말하기 어려운 답변이긴 하네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없이 그냥 이재명만 있었다, 그럼 어디서 기본소득을, 그냥 어디서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겠느냐? 반대로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처럼 확산됐겠는가?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체가 된 기본소득운동의 흐름에 이재명이 동참한 것이고, 반대로 기본소득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통로를 찾아낸 거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정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 기본소득 정세적 하강기이나, 한국 정치에는 주기적 정상적 포퓰리즘적 계기 있어

그러면 적어도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의제화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의제화 됐다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현실 정치가 혹은 행정가를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가 됐고 그래서 처음에 나름의 관심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충분히, 열렬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정책의 등장과 함께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 속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지닌 여러 측면들이 희석화 되기도 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이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봐야겠죠. 대선만큼 기본소득이 고조될 수 있는 정상적 계기는 없는데, 아무튼 지금은 대선을 지났으니까 퇴조기는 퇴조기죠.

옛날에 기본소득의 역사 쓰시면서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에게선 선거국면이라는 상시적인 웨이브가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채택되지 못하고 대선이 끝났으니 그런 의미에서 퇴조기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주기적이고 정상적인 포퓰리즘적 계기가 한국 정치에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정치에도 이런 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오바마가 처음 될 때도 2016년 트럼프가 될 때도 그렇고, 2020년은 잘 모르겠고. 특히 한국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의 경우는 이번에는 도리어 오른쪽에 그런 계기가 있던 것이 아닐까, 혹은 정확히 말하면 좌우 포퓰리즘이 충돌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관점에서 보면 이 충돌의 결과는 당연히 퇴조인데 어디까지 퇴각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 어디까지 갈지는 정해져 있는 건 물론 아니죠.

### 지방선거 통한 그간의 성과 보전 및 확산 노력과 기본소득의 정당성 필요성 심층 연구 필요

그러면 기본소득네트워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과 거꾸로 말하면 한계겠죠, 그런 게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 최대한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거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산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일긴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실의 변화에 맞게 그것을 한편으로 깊이 있게 한편 넓게, 예를 들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람들이 좀 같이 집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2009년 이후에도 한 게 그런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른바 재원조달 계획까지 가는 일련의 구상들을 당시에 했던 거고, 그것을 일종의 지적인 저장고 삼아서 청년기본소득 안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물론 이 작업을 꾸준히 하되 지방선거까지는 앞서 말한 제도적 확산 노력을 해야겠지요. 대선으로 하나의 순환이 끝났다고 했지만 지방선거까지 끝나야 그 순환의 결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예요

그러면 국내적인 얘기만 했는데 기본소득 국제 운동의 참여라고 할까 또 혹은 기여라고 할까 그랬을 때 우리가 몇 년 전 총회를 통해가지고 공유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나 이런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의제화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깊게 정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정리가 돼야 하겠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